	<h1>보도자료</h1>	2016. 10. 24(월)	
		작성 · 문의	<총괄> 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 044-200-2056)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 국조실 성과관리총괄과장 김영선 (☎ 044-200-2509)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박봉균 (☎ 044-201-6831)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 국조실 평가총괄과장 최용선 (☎ 044-200-2468)
* 엠바고 : 10.24(월) 16:00(회의종료) 후 사용 / 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화학사고) # 브리핑(화학사고) : 10.21(금) 14:30, 정부서울청사, 정부업무평가실장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등 확정
 - (화학사고) 수요자 중심으로 기준 정비, 중복규제 개선, 운송차량 점검강화
 - (핵심개혁) 25개 과제 구체적 성과 가시화, ‘국민체감 향상과 연내 입법’에 총력
- 정부는 ‘16.10.24(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고,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 참석자 :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차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 <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
- 우선,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하여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한다.(17.상)
- *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유해·위험물질(고용부), 고압독성가스(산업부), 위험물(안전처)
- ** 예) 실내 저장시설 높이 기준 : 8m 미만(환경부) ↔ 6m 미만(안전처) 등
-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

- 그간 일부 중복 적용*되어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설 안전검사·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유사 제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現 69종 ↔ 미국 140종)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69종 지정(화학물질 관리법)

- 또한,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반 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 원인('13~'16.6) : 작업자 부주의(46%), 시설관리 미흡(33%), 운반차량 사고(21%)

-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17.상)할 방침이다.

* 예) 시너를 적재한 트럭이 터널내 전복·폭발, 21명 부상, 10여대 차량 화재('15.10)

- 또한,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17.상)할 예정이다.

* 운반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17)과 연계, 준수여부 확인강화

-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사고대비 훈련 강화 등, '17.상)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16.하)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 >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 핵심개혁과제 2년차인 올해는 25개 과제별 핵심성과를 창출하고 주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지방재정 개혁, 맞춤형 보육 등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 고용복지+센터 확충, 핀테크 서비스 출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 야	주 요 성 과 (9월 현재)
공공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 시군 조정교부금제 개선 → 107개 시군 평균 42억원 조정교부금 증가
노동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 4,331명 확산 • 20개 고용복지+센터 신규개소, 서비스연계 8.2만건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3,213교) • 일학습병행제 신규 참여기업 2,337개
금융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신청(K뱅크 9.30) 및 연내 출범예정 • 기술신용대출 17.5조원 공급, 크라우드펀딩 80건 130억원
경제혁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747개 중소기업 혁신지원 • 출연(연) 패밀리기업 확대 5,009개, 중소기업 인력파견 252명 • 스마트팜 원예 488ha / 축산 142호 보급 • 철강·석유화학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27개 지역전략산업별 재정지원방안(3년간 3.1조원) 수립

○ 다만, 주요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국조실과 각 부처는 연말까지 과제별 성과를 더욱 높이고, 현장에서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인·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1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약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등

1. 분석 · 평가배경

- 구미 불산 누출사고('12.9) 이후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13.7) 수립 등 화학사고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오히려 화학사고는 증가 추세**
 - * 주요 내용 : 노후·취약시설 개선 투자 확대, 안전교육 강화,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구축, 정보 공유 등
 - ** 화학사고 발생현황 : ('13)86건 → ('14)105건 → ('15)111건 → ('16.6)48건
- 화학물질 취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분석 필요
 - * ('10) 143,014 → ('11) 150,515 → ('12) 158,145 → ('13) 161,157 → ('14) 163,618 (단위 : 천톤)
- 특히, 관련 법령의 상이한 관리기준 등 정비, 화학물질 운송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현장의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2. 화학사고 예방 · 대응체계 현황

- (화학물질 관리현황) 관련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유해·위험물질(고용부), 고압독성가스(산업부), 위험물(안전처) 등 상이한 명칭과 분류체계로 관리
 -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부), 위험물안전관리법(안전처)
 - 각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관리기준, 검사주기, 처벌기준 등이 상이
 - 유해성·사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각각 위해관리계획(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 안전성향상계획(산업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 (화학사고 관리체계) 화학사고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환경부에 설치토록 하여 화학사고의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13.9)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수습 등 전과정 관리 전문기관으로 「화학물질안전원」('14.1)과 6개 주요 산업에 관계부처 「합동방재센터」 신설
 - * 센터내 5개 팀(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 운영

3. 분석 ·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① 화학물질 안전관련 법령·제도 정비

- ① (화학물질 관리·취급 방법 등) 법령별로 법제정 취지에 따라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관리 방법 및 취급·시설기준 등이 상이하여 혼선 초래

* 관리대상 기준량, 유해위험성 표시, 저장시설 높이기준, 내화기준 등(참고1)

⇒ 관계부처 TF(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안전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

- ② (유사·중복관리 제도) 법령별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관리 교육 등에 있어 유사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업체의 부담 가중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해 제도간 상호인정 및 연계 방안 강구

· (예시) 사고대비물질이자 유해위험물질인 황산, 암모니아*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작성에 약30백만원 소요)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약45백만원)를 각각 작성하고, 소관부처의 검토·심사를 받아야 함

→ 양 계획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통합서식에 한번만 작성**토록 하고, **△부처의 검토 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계획서 작성 비용과 검토·심사 부담을 저감

* 물질의 유해성 정보, 공정운전절차 등 안전정보,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인 1800개 사업장 중 약 650여 개소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③ (사고대비물질) 사고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69종이 사고대비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 지정되어 있으나, 외국에 비해 그 수가 적으며*, 지정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다수 발생('06년~'13년, 10종 22건)

* 미국환경청(EPA)의 경우 총 140종의 물질에 대해 위해관리계획(RMP) 실시중으로 이중 33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사고대비물질로 관리

⇒ 사고 우려가 높은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 강화

② 화학물질 운송 안전관리 강화

① (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점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교통안전법상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고압가스, 위험물 운송차량은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점검을 시행한 예는 거의 없음

⇒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도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 고압가스·위험물 운반차량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통 안전점검 강화

② (소규모 운반차량 관리) 탱크로리 등 화학물질 전용 운반차량은 관리대상이나 일반화물차를 통한 소규모 운반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 운반차량 화학사고의 약 25%가 소규모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이나, 소규모 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영업허가 및 운반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일반화물차 이용 시 화학물질 용기의 적재·고정방법에 대한 규정 명확화*, 과적시 일반화물보다 범칙금 상향** 추진('17.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③ (운전자 휴식시간)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운전자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이 타법에 비해 모호하고, 실제로 화학물질 운전자 법정 휴식시간 미준수

⇒ 운전자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이상) 보장,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를 통해 실제 휴식시간 준수여부 확인

* 국토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 '17년 시범사업 추진예정

④ (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운반계획서*의 비율이 약 60% 수준으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

* 일정규모 이상의 유독물질(1회 5톤 이상) 등 운반시 운반물질, 운반경로 등을 작성, 지방청에 제출

⇒ 온라인 운반계획서 홍보·교육, 고령자도 이용하기 쉽도록 운반계획서 관리시스템 개선 등 온라인 운반계획서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③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

① (신속한 사고신고·전파)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15분 이내)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 및 전파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사고접수 소요시간(환경부) : 24분('15.상) → 44분('15.하) → 26분('16.상)

⇒ 사업장 홍보·처벌 강화 등 신고지연 방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활용률(現 26.4%) 제고 방안 등 사고접수 시간 단축 방안 마련

* 유선접수 평균 소요시간은 38분으로 NDMS(12분)보다 3배가량 더 걸림

② (합동방재센터 운영 개선)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일부 있으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하여 초동대응에 한계

⇒ 합동방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 △정보공유 활성화·합동훈련 강화 등 사고대응 분야 보강, △골든타임(30분)내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할 범위 조정 등

③ (현장지휘권 일원화 및 기관간 협력) △화학사고 발생 시 합동방재센터 119 화학구조팀과 지역 소방관서간 현장에서의 지휘권 혼선 발생, △안전처 및 지자체의 구조·대응 기관*이 신설·강화되었으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기능이 중첩

* (중앙)안전처-특수구조대(4개소, '14.12)-화학구조센터(6개소, '13.12)
(지방)시도-특수구조단(10개소)-지역소방서

⇒ 현장 지휘는 지역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합동방재센터와 지역소방서의 업무 구분 명확화*

* 초동대응은 지역 소방서 중심, 합동방재센터는 지원 기능을 수행

⇒ 중앙의 특수구조대와 시도 특수구조단간 사고발생 지역별·사고 규모 등에 따른 출동기준 마련, 지휘체계 등 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협력 강화

4. 향후 추진 계획

□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TF 운영(~'17.6)

[참고1] 법령별 상이한 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 (사례1) 일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표시(그림문자) 상이

- 디메틸포름아미드 (CAS No.68-12-2)

시스템	유해위험성(그림문자)	소관부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NCIS)		환경부
국가 위험물 정보시스템		안전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MSDS)		고용부

□ (사례2) 단층건물의 높이 기준 (화학물질관리법vs위험물안전관리법) 상충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 단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를 8m 미만 으로 하고 그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 옥내저장소 기준)	-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 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함

□ (사례3) 내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vs산업안전보건법)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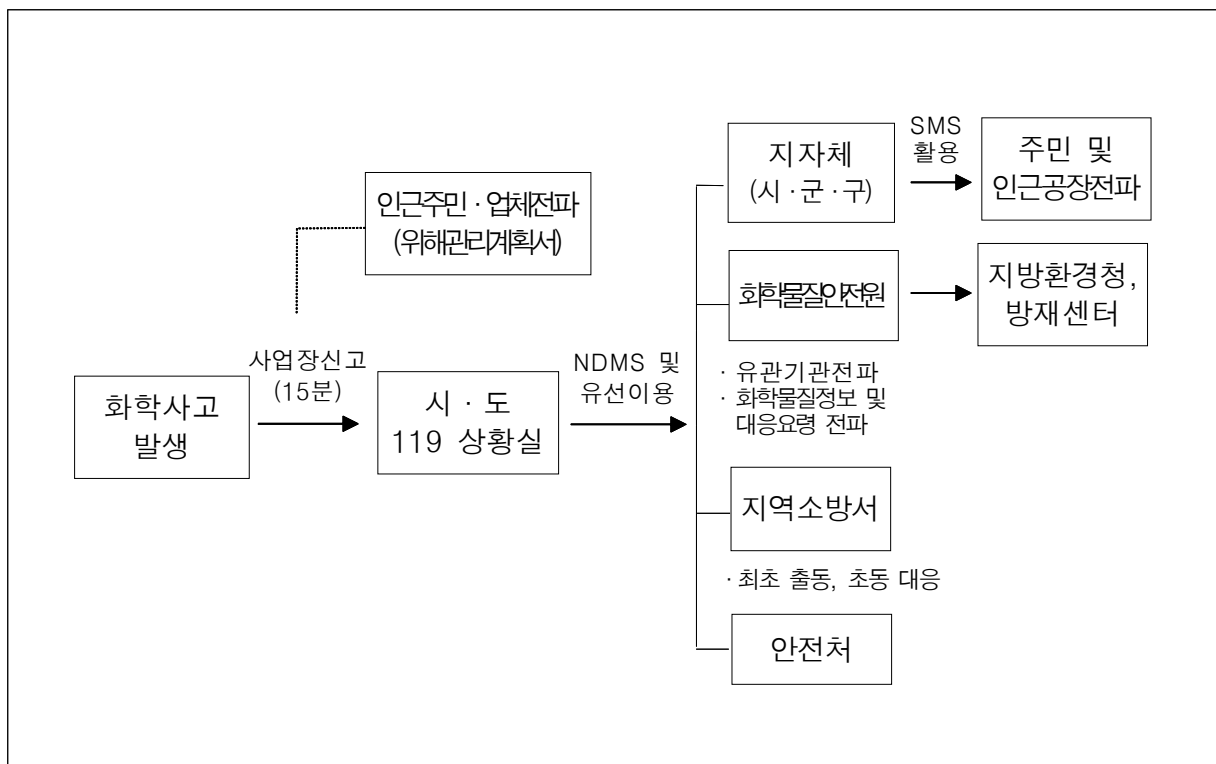
화학물질관리법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8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참고2] 안전교육 중복 및 화학사고 신고·전파 체계

□ 안전교육 중복

구분	교육기준	소관부처
화학물질 관리법	일반안전교육(16시간/2년), 종사자 교육(2시간/년), 양성교육(32시간)	환경부
산업안전 보건법	정기안전교육(6시간/분기 이상), 특별안전교육(16시간 이상)	고용부
위험물안전 관리법	강습교육(안전관리자 24시간, 운송자 16시간), 실무교육(8시간/2년)	안전처

□ 화학사고 발생시 신고·전파 체계



1. 공공개혁

□ 공무원연금 개혁

-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금년부터 본격 시행(1.1)
- 당초 재정추계시 예상한 재정절감 효과*가 구체적으로 시현중
* '16년 1.5조원(3.7→2.2), '17년 2조원(4.6→2.6, '17년 예산안) 재정보전금 절감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다문화가족지원 등 205개 사업 추가 통폐합 추진('17년 예산안 반영)
- 존속기간이 만료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로 불요불급 사업 폐지,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평가** 실시
* 일몰도래 472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 31개(6.6%) 폐지 및 6,675억원 감축
** 100억원 이상 58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평가(5월, 7월) → 36개 부적격 판정

□ 공공기관 기능 조정

-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완료(6.10)
*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 간부직(7%, 2급이상) → 비간부직(70%, 4급이상)
- 에너지·환경·교육분야 36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마련
* 기관통폐합 5(기초전력연구원 폐지 및 한국전력연구원으로 통합 등), 구조조정·비핵심업무축소·경영효율화 등 31

□ 지방재정 개혁

-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107개 시·군이 평균 42억원 조정교부금 증가 예상
* 배분기준 구성비 : 인구수(50%), 재정력지수(20→30%), 징수실적(30→20%)
- 26개 지방공기업(S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부채비율 감소
* ('14) 부채총액 49.9조, 부채비율 148.3% → ('15) 47.7조, 136.9% → ('16.6월) 46.1조, 128.4%

2. 노동개혁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추진중
 - * 2단계('16~'17) : 15,262명 정규직 전환('16년 10,085명, '17년 5,177명)
-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도입*
 - * (기존 6)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추가 3)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 민간부문 454개 사업장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완료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직종·직급별 임금정보* 공표
 - * 2,900개 사업장 3.3만명 근로자 조사 후 임금정보 공개
- 임금피크제 컨설팅 등으로 누적 1,326개 사업장 도입 완료

□ 일·가정 양립

- 남성 육아휴직 5,220명,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 4,331명
- 맞춤형 보육 시행(7.1)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보육 인프라 지속 증가
 - * 공공형 어린이집 212개소, 직장 어린이집 12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122개소 신규 확충

□ 고용복지+센터 확충

-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센터 개소 확대

'13~'15년 (40곳)		('13)남양주 (14)부산북부, 구미, 천안, 서산, 동두천, 춘천, 칠곡, 순천 등 (15)서울동부, 경주, 김포, 충주, 청주, 보령, 경산, 수원 등
'16년 (30곳)	既개소 20곳	(6월)여수, 남원 (7월)인천, 성남, 대구, 대전, 용인, 울산, 대구서부, 창원 (8월)거제, 영주, 포항 (9월)김해, 제주,평택, 통영, 고양, 이천, 부산동부
	예정 10곳	영월, 부산, 문경, 서울강남, 대구강북, 서울, 전주, 논산, 세종, 경기광주

- 센터를 통한 고용↔복지 서비스연계 82,017건,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수 17% 증가

3. 교육개혁

□ 자유학기제 확산

- 전국 3,213개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
- 자유학기제 성과가 중학교 내 다른학기, 고교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및 고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등 시범 운영중

구 분	자유-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시범학교
학교 수	80교	55교
운영 내용	일반학기 학생 참여·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 평가 혁신 등 적용	능동적 직업세계 대처, 소질·적성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집중 제공
주요 학교	서울 당산중, 부산 금양중, 광주 평동중, 경기 중산중 등	서울 대신고, 부산 기장고, 광주 금호고, 경기 이매고 등

□ 일학습병행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16년 신규 2,337개), 학생* 수 등이 꾸준히 증가
* 고교(60개 2,674명), 전문대(16개, 480명), 4년제(24개, 2,873명)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실시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기반 교육훈련* 및 자격개편** 등 정상 추진중
* 쏘특성화고·마이스터고(547개), 전문대(92개) 등에서 NCS 기반 교육·훈련 적용
**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615종 산업계 검증완료 및 개편·도입방안 마련

□ 지방교육재정 개혁

- 보통교부금 학생 수 교부비중을 확대('15년 30.7% → '16년 36.7%)
-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정원이 배정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및 교원배정*
* '16학년도 배정(초등 148,445명, 중등 143,970명) 배정 및 '17년도 가배정(초등 148,245명, 중등 143,570명) 완료
- 소규모 분교 통합·폐지 등을 통해 64개 적정규모 학교 육성

4. 금융개혁

□ 핀테크 육성

- 금년중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전망

*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신청(K뱅크 9.30, 카카오뱅크 11월 예정)

- 다수·소액투자 방식인 클라우드펀딩 본격화 (80건, 130억원)

성과 사례

- 와이즈케어 : 펀딩금액 5억원, 간편결제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로 펀딩 성공을 통한 공신력으로 대형 거래처 확보
- 소프트웨어 인라이프 : 펀딩금액 3억원,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업체로 성장사다리펀드내 매칭펀드(K-클라우드펀드) 후속투자 유치

-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

성과 사례

- 간편 해외송금 : 수취인의 은행계좌 없이 전화번호만 알면 스마트폰 app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하나·신한은행 등)
- 스마트폰 OTP : 별도의 기기없이 스마트폰 app 설치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1회용 비밀번호(OTP)를 생성·사용하는 서비스(신한은행)

□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기술·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17.5조원 공급

- 기술금융을 투자형태로 확대하기 위한 기술금융펀드 1,078억원 투자 집행

□ 금융감독 개선

- 금융감독을 제재·적발위주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

* 금융회사 종합검사 : '15년 15회 → '16년 2회

- 20대 금융관행 개혁 및 5대악 척결 지속 추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15.6),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15.8),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15.9) 등 1차 20개 과제 추진• 실손보험료 과다인상 요인 시정('16.5),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16.6) 등 2차 20개 과제 추진중
5대 금융악 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5대 금융악, 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행위 근절 추진중•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청과의 현장예방·검거 체계 구축('16.3),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제도 강화('16.1) 등

5. 경제혁신 등

□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당초 계획대로 공급중

구 분	3/4분기 실적	4/4분기 계획	합 계
부지확보	4.2만호(76%) (부산 우암, 인천 미추8, 고양능곡 등 20개 지구)	1.3만호(24%) (김포 고촌, 남양주 진건, 용인 언남, 서울 개봉 등 4개 지구)	5.5만호
영업인가	1.1만호(44%) (수원 호매실, 대구 대명, 부산·대구 하나은행 등 15개 지구)	1.4만호(56%) (서울 문래, 영등포 교정시설, 인천 십정, 부산 우암2 등 9개 지구)	2.5만호
입주자집	0.34만호(28%) (화성 동탄2, 화성 반월, 화성기산 등 4개 지구)	0.86만호(72%) (충북 혁신, 인천 서창2 인천 청천2, 인천 십정 등 4개 지구)	1.2만호

□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창업기업 지원성과* 지속 확산중
* 중소기업 혁신지원 1,747개, 투자유치 3,232억원, 창업기업 육성 1,264개
- 고용존을 통한 직업훈련·교육 참가 7,683명, 취업 1,907명
- 예비창업자 발굴·교육을 위한 창업선도대학 34개 지정 및 기술창업자 4,062명 육성

□ 농수산업 미래성장 산업화

- 스마트팜 구축·보급실적 확대* 및 창조마을 23개 신규 조성중
* 스마트팜 원예 488ha·축산 142호 보급
-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지원 등 6차산업 창업보육으로 306명 창업완료

□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 문화창조융합센터 방문객 4.4만명, 융복합 콘텐츠 20건 기획
- 문화창조아카데미 융복합 프로젝트 1개 완료 및 5개 수행중
- 콘텐츠 파크/융복합 공연장인 K-Culture Valley 착공(5.20)

□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패밀리기업 확대	• 출연(연)이 연구자원(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기업	5,009개
중소기업 인력파견	•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만성적 연구인력 부족을 지원	252명
중소기업 기술이전	•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기술)를 이전하여 사업화	1,738건

성 과 사 례

- 새로운 수익모델로 바이오가스 발전에 주목하였으나 CO₂ 포집 등 핵심기술의 부재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에너지기술연구원(KIER)에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구원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성공
(주)기반, 비료생산·사료수입 중소기업)

□ 서비스산업 확충

- 의료기관 10개소 신규 해외진출*

* K-뷰티메디컬센터·올포스킨피부과(중국), 오라클랜드(일본), 유디치과(미국) 등

- 외래관광객 1,300만명 유치, 관광수입 116억불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

□ 제조업 혁신 3.0

- IT·SW 등 첨단 제조기술을 결합한 스마트공장 2,138개 구축 지원중
- 「기업활력법」 본격 시행 및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9.30) 등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 지원

□ 에너지신산업 육성

- 에너지신산업 시장 7,726억원(에너지저장장치(ESS) 4,324억원) 창출
- 친환경에너지타운 8개소 신규착공, 6개소 신규선정

□ 규제프리존 도입

- 27개 지역전략산업별 재정 3.1조원(3년간) 마련('17년 3,874억원)
-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 추진중(경기대응 30개, 특화산업 288개)